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공동행

지역의 민관 자율형 협력체계 구축 모델과 사례

2009



/대/통/영/직/속/

지역발전위원회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發刊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9월 10일에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고, 12월 15일에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금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발전시켰다. 그리고 지역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발전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청와대에 신설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역발전 의지를 천명하였다. 금년부터는 광역경제권을 필두로 초광역개발, 기초생활권개발, 4대강 연계 지역개발, 재정분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의 성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다. 그리고 기본방향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이다. 즉,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산술적 균형에서 역동적 균형으로, 중앙집권적 시혜에서 분권과 자율로, 소규모 분산투자에서 통합과 규모의 경제로, 소모·모방적 지역주의에서 생산·창조적 지역주의로 일대전환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현 시점에서 지역정책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 모델과 우수 사례를 학습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지역발전을 향한 행복한 동행』은 우선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을 설명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민관협력의 지역개발 이론을 소개한 후, 다양한 분야의 연계협력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연구하거나 전환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지역현장에서 자율적이며 연계협력 방식에 의해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책자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 상 철

색무취한 획일적 계획으로 전락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도 정해진 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계획 - 집행 - 평가 - 환류의 선순환구조의 창출이 미흡하였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정책체계와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도는 제한적인 성과에 머무르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방분권을 예로 들면 가장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균형발전정책도 역시 균형특화계획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중앙부처간 이해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액·중복투자가 만연하였으며 시·도간 안배방식을 답습하였다.

자본, 노동, 정보, 금융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균형발전전략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과거와 다르게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국가 주도의 자원배분체제 보다는 지역단위에서 각자 특성을 살린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Local Governance)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으로 자원배분의 규모화, 집적화를 요구하며 행정구역 내부에서도 기업-자치단체-주민-전문가 사이의 전략적 일체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신정부 지역발전정책은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조류에 조기대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의 근간을 재구축하는데 있다. 산술적 균형(Balance) 보다는 상생과 협력, 그리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에 의한 균형(Equilibrium)을 추구하며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권형 시스템의 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인 배분을 지양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도토리 키재기식' 보다는 절대적인 발전역량을 고양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3.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추진

1)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개요

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화발전이 핵심이다. 권역별 특화 발전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① 권역별 핵심 선도프로젝트 추진, ② 규제 완화·폐지 등 선도프로젝트 추진기반 구축, ③ 권역에 참여하는 시·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협의체(광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

지역의 우선순위,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30개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선도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용지 확대, 맞춤형 규제완화 등 기반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5〉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는 소위 3위일체적 전략 즉, ① 광역경제권별로 핵심 선도산업 육성(3년간 9천억원 투자), ② 30개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투자), ③ 인력양성(권역별 1~2개 거점대학 육성, 5년간 3,500억원 투자)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별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핵심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권역별로 1~2개) 연구개발, 특허,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전방위적으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2009년 2,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년 내 단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목표 지향적 추진방식을 도입하여, 수출 60억달러 일자리 창출 2만명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6〉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선도산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후방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종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안배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선도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원리'를 적용

-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는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의무대상자를 위한 RECs(재생에너지증권) 구매 시장이 조성될 것이다. 초기 시장안정화를 위해 RECs의 자유 거래가 제한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조달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비용절감 노력이 이뤄질 것이다.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의 중앙집중식 발전에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우수한 시설 장비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안정적 전력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을 모니터링하고 소규모 전력 시설의 송배전 및 전력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신규 건물의 경우 전기·가스 이외에 지열·풍열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조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에 따라 산업용 공조기기 시장이 20~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8〉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출처 : 냉동공조 2008년 12월호, 한국냉동공조협회,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4.

